

# 한국의 비판언론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

문화연구와 정치경제학을 중심으로\*

조항제\*\*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이 글의 목적은 문화연구와 정치경제학을 중심으로 한국의 비판언론학을 성찰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문화연구의 ‘소비로의 전환’은 문화연구를 신수정주의로 부르게 만든 결정적인 요소의 하나지만, 한국에서는 비판적 문제의식의 단절로 읽혀져 문화연구에 대한 끊임없는 정체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정작 정치경제학은 자신이 중시하는 생산(과정)/구조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내지 못했고, 문화연구 역시 이 부문에서는 무관심으로 대응했다. 국면주의는 문화연구가 현실에 개입하는 유력한 방식이지만 초기의 연구 외에는 후속연구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해 이론화 수준이 높지 않고, 한국에서의 연구 또한 아직은 많은 논란을 안고 있어 성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비판연구가 가진 저항성의 문제는 운동론에서 두드러지는데, 이 글에서는 문화연구의 특징이 잘 배어 있는 소수자문화운동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회적 배치의 여전히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래의 방향에서는 일부 논자들이 제안한 바 있는 문화연구와 정치경제학의 화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이의 근저에 있는 근대주의/탈근대주의 합의의 가능성과 필요성 역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결합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는 ‘복합적 합의’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시공간의 재조직’, ‘소비자본주의’, ‘문화적 시민권’(또는 ‘문화적 공론장’), ‘생산문화’, ‘시민/소비자’, ‘차별화/차이’, ‘공영방송의 미래’ 등을 양측이 서로 경(결)합할 수 있는 공감대가 큰 연구주제로 꼽았다.

주제어: 비판언론학, 문화연구, 정치경제학

---

\* 이 글은 2008년 5월 16일에 개최된 한국언론정보학회 20주년 기념세미나에서 ‘한국 비판언론학의 정체성’이란 제목으로 발표되었던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수정·보완에는 당시 토론을 맡았던 정연규, 정의철 교수 그리고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다. 당초 제목을 변경한 이유는 ‘반복적 실행을 통해 내면화된 자기 동일성’ 같은 ‘정체성’이 어떤 특색을 분명히 띠고 있지 않은 현재의 비판 패러다임에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 hcho@pusan.ac.kr

## 1. 문제의 제기

이 글의 목적은 그간의 연구사를 염두에 두고 (주로) 2000년대 한국의 비판언론학 또는 비판커뮤니케이션연구(critical communication studies)를 비판적으로 성찰해보고자 하는 데 있다. 정확하게 기원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1970년대 후반에 문제의식이 시작된 이 연구흐름<sup>1)</sup>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약 한 30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다. 초기에서 1990년대로 넘어올 때의 변화가 패러다임 차원의 질적 변화였다면(임영호, 2001),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차이는 제도화와 한국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적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의 변화가 주로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현실 사회주의의 패망 같은 외적인 것에 의해 이루어진 바가 크다고 한다면, 뒤의 변화는 주로 학문영역의 대학 내 정착과 안정적 재생산체제의 마련 같은 학문 내의 것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뒤에서 다시 살펴보듯 한 차원, 한 부분의 이유로만 단순화시켜 이러한 변화들을 설명할 수는 없다. 모든 큰 변화는 질과 양, 안과 밖 모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제목은 비판언론학으로 지칭했지만 사실 그 범위는 넓고 느슨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가장 포괄적으로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 영국에서 1990년 이후 지금까지 4판을 거듭해서 나온 교본 형식의 『대중매체와 사회(Media and Society)』가 가진 내용 전반을 들 수 있을 것이다.<sup>2)</sup> 또 아주 좁게는 특정한 기준(이를테면 Calhoun, 1995)을 적용시켜 정체를 분명히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포괄의 범위가 너무 넓어 리뷰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준의 적절성을 찾을 수 없어 리뷰의 의의도 그만큼 떨어진다

- 1) 한국에서 비판연구의 시발로 볼 수 있는 가시적 결실은 역시 『커뮤니케이션과 이데올로기』(이상희 편역)이다. 이 책이 나온 연도가 1983년이니까 그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대체로 1970년대 후반 이후부터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할 듯하다.
- 2) 이 교본은, 전체를 관점·생산·표현 등의 3부로 나누고, 주로 2·3부에서 문화·미디어의 여러 영역과 당시에 중요하게 대두된 이슈들을 교차시켜 17~20개의 장으로 구성한다. 따라서 1부는 큰 변화가 없지만, 2·3부는 부각된 미디어(인터넷처럼), 문화적 경향, 학문적 이슈 등에 따라 다양한 주제들을 다룬다.

는 약점이 있다. 후자는 내포를 지정하는 작업 자체가 리뷰의 성격을 지너 범위를 제한하는 작업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범위에 대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한데, 이 글에서는 질적(비판 패러다임<sup>3)</sup>의 사용), 양적 차원(연구자들의 상대적 규모)을 감안하여 문화연구(및 이데올로기연구), 정치경제학에 일차적 중점을 두고, 기타 패러다임(페미니즘이나 대안언론, 문화제국주의 등)은 논의의 전개상 필요한 경우에만 언급하고자 한다. 한국에서의 연구가 주 대상이지만, 다른 리뷰연구와 달리 패러다임 자체가 문제되거나 (논쟁 등에서의) 대응양상·현상의 유사성이 클 경우에는 서구의 연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려 한다. 논리적 정합성이 증시되는 패러다임 내부의 문제는 서구나 한국에 큰 차이가 있기 어렵고, 학문적 교류가 활발해진 2000년대 이후로는 양자가 같은 호흡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된 점이 가장 큰 이유이며, 현상 면에서도 글로벌화의 경향이 사실상 같은 성격의 변화를 몰고 오고 있어 온전한 성찰과 논의의 풍부화를 위해서는 범위를 넓히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물론 차이 역시 마찬가지로의 맥락에서 부각시키려 애썼다). 대상 시기 역시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 글은 대체로 새로운 연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2000년대 이후를 중심에 두고자 한다.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같은 형식의 연구(임영호, 2001)가 있어 재론을 피하고 싶었고, 시기를 좁히면 상대적으로 연구의 초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화연구의 경우에는 이 시기에도 이미 ‘내부자’의 농밀한 시각으로 여러 리뷰연구가 진행된 바 있어<sup>4)</sup>(원용진, 2000; 2005; 이상길, 2004; 유선

3) 여기서의 비판패러다임은, “적어도 한 세기 동안 맑스주의는 더 이상 외부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제국주의적 중심의 바깥에서 지식인들의 문화적 주체성의 일부가 되어왔다”(Chen, 1998, 13쪽; 번역 수정)는 평가를 받는 맑스주의처럼 현실에 대해 일정한 비판/변화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이론적 이해에 대한 자기 비판적 성찰(Calhoun, 1995)을 갖는 지적 흐름을 아우르는데, 대체로 이는 미시적이면서 행태중심적인 미국식 실증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반대를 외연으로 하고, (탈)맑스주의, (탈)구조주의, 기호학, 정신분석학, 페미니즘 등을 그 내포로 하는 것이다.

4) 이 글을 쓰면서 왜 다른 영역에 비해 문화연구에서 유독 이런 리뷰가 많은지 그 이유를

영, 2004; 강명구, 2004b; 이영주, 2006), 자칫 이 글 같은 ‘외부자’의 시도가 무용한 참견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비판’의 궁극적 목적과 정합성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는 이 연구의 리뷰 기준이 주로 문화연구 내의 ‘조류’와 관련된 연구들이 세부적으로 논의된 내부자의 것에 비해 나름의 차별성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행연구들을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문화연구에 대해서만큼은 ‘메타-메타 비판’을 시도해보려 한다.

서론의 말미에 꼭 밝혀둘 필요가 있는 것은 이 글이 중점을 두고 성찰하려는 것이 ‘문제의식’이라는 점이다. 이 글은 관련 분야의 전 연구를 양적 기준으로 분류해 특징을 추출하기보다는 문제의식의 측면에서 그간의 연구사에 어울리는 전형적인 연구들을 찾고 그 연구들을 중심으로 비판적 성찰의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나온 일부 연구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특히 메타-메타비판을 수행한 문화연구에서) 문제의식에서 포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 2. ‘소비로의 전환’과 ‘대안의 부재’: 소비의 문제

비판패러다임 진영 내에서 상호비판이 보다 첨예하게 된 계기는 문화연구의 변화를 신수정주의로 명명하면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커런의 1990년 연구(Curran, 2002/2005에 재수록)일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토대/상부구조 사이의) ‘결정’(determination)의 문제 등을 두고 정치경제학과 문화연구 양

---

생각해보았다. 평가와 반성, 방향성의 재점검이 리뷰의 목표라면, 아마도 문화연구가 최근 들어 양·질의 괴리, 규범적 기대와 성과·방향의 불일치 또는 영역의 원심화(다양화·학제화)와 구심화(제도화·체계화)에 따른 형식화·구획화)의 동시적 작용 같은 나름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그 이유일 듯하다. 특히 이에 비해 주류 연구는 리뷰 연구들 거의 하지 않는데, 만약 그 이유가 대상의 방대성이라는 기술적 측면 이외에 방법론적 도그마에 대한 반성의 결여에 있다면 이는 학문의 발전에 큰 저해가 아닐 수 없다(정치학에서의 김응진(2001)의 연구는 방법론의 도그마화가 가진 문제의 심각성을 새삼 일깨워준다).

진영 간에 논쟁이 있었지만, 양·질적 정도에서 이 이후에 비할 바는 아닌가 한다. 그런데 이해는 서구에서보다는 한국에서 더욱 획기적인 연도로 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해에 들면서 직전의 현실사회주의의 패망이 실감나게 다가왔고, 이른바 ‘87년 체제’의 민주화가 정착기에 접어드는 듯했으며, 무엇보다도 비판패러다임의 젓줄이 되었던 운동이 퇴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접한 커런의 문제제기는 저자에게는 새로운 조류에 대한 비판의 목적이 앞선 글이었음에도 한국에서의 수용양태는 오히려 그 조류를 습득하게 하는 역효과를 내는 듯 보였다. 한국의 현실이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변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변화는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던 인접 학문에서 더 두드러졌다. 사회학·정치학 등에서 맑스주의의 퇴조와 탈근대주의의 등장 조짐이 분명해진 것이다.

영국의 문화연구사를 돌이켜보면 신수정주의 같은 문화연구의 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홀의 그람시에 대한 꾸준한 천착<sup>5)</sup>도 그렇고, 대처리즘을 예고한 이데올로기주의 분석(Hall et al, 1977; Jessop et al, 1984의 명명)도 이미 1970년대의 산물이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적 차원의 ‘이데올로기’가 아닌 ‘의식’(ritual)이나 ‘수용 환경’에 주목하는 수평적 차원에서의 수용자에 대한 물리의 주목 역시 이미 1974년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Morley, 1980/2006). 그러니까 커런의 비판은 그 연도가 (한국의 경우와 같이) 공교롭게도 1990년이었을 따름이다.

물론 그럼에도 1980년대 중/후반에 이루어진 문화연구의 변화, 특히 ‘저항

- 
- 5) 대체로 홀을 기준으로 볼 때, ‘대중의 부각’으로서의 그람시에 대한 주목은 초기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테면 홀은 1977년 연구(Hall, 1977a; 1977b; Hall et al, 1977)에서부터 그람시를 미디어·이데올로기 연구에 적용했고, 이미 비판이론의 초창기였던 이 시기에 지배이데올로기체제의 ‘불안성’과 이데올로기의 ‘펼연적이지 않은 계급 귀속’을 제기했다. 1980년 연구에서 홀은 계급을 “단지 이데올로기 투쟁도 포함한 모든 수준의 사회적 실천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투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의 복합체일 뿐”(Hall, 1982, p.83)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사실상 이전까지의 경제적 계급론을 거부했다. 이 점들로 미루어볼 때, 초기 비판이론의 변화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적 해독', '기호학적 민주주의', '대중의 분별' 등을 주도한 피스크의 영향은 자못 지대한 바 있다. 문화연구에 대해 수시로 나온 같은 형식의 비판적 리뷰들(Garnham, 1995; Ferguson & Golding, 1997), 문화연구자 자신의 자기 점검(Morley, 1996/1998) 등에도 이 부분은 고루 언급된다. 몰리도 지적한 바대로 피스크와 자신의 차이가 작지 않고(Morley, 1992), 또 그의 목소리가 다소 과장되게 인식된 측면 또한 크다 하더라도(Morley, 1996), 문화연구의 변화(수용자, 수용환경, 구성주의, 민속지학 등)는 그에 이르러 보다 크게 부각되고, 미국 등에서의 제도화 속도 역시 빨라진다.

그러나 피스크의 영향은 한국에서는 상당한 지체를 겪는다. 학문적 이론을 운동의 자원이나 도구쯤으로 간주했던 이전의 1980년대는 아니었다 해도 1990년대 역시 생산부문(‘토대’)의 획기적 변화, 곧 수직적 문제의식을 포기할 수는 없었고, 수용의 강조는 이를 저해하는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웠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완강했고 이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이론의 지위는 계속 박약해지면서 학문 장은 피스크를 비롯한 탈근대의 분위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sup>6)</sup> 현실(의 보수화)과 학문적 실천(맑스주의의 포기)이 일정하게 부합된 것이다.

박약해진 이론의 지위란 당시 비판패러다임의 주류였던 맑스주의, 특히 정치경제학의 소비 폄하(한 걸음 더 나아가면, 포퓰리즘을 무시하는 일종의 엘리트주의<sup>7)</sup>)가 가진 근본적 약점을 말한다. 정치경제학이 가진 경제중심의 관점, 특히 ‘환원주의’로 비판받은 초기의 사고틀에서는 소비의 문제는 애초부터 부각되기 어려웠다. 당초의 입장을 다소 약화시키면서 정치경제학도

6) 이 분위기를 강상현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어떤 면에서 비판적 연구 진영은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급진이론이 지니는 현실적 한계나 위기의식을 ‘포스트’의 그늘 밑에서 다소나마 희석시킬 수 있었고 전통적 연구진영 역시 ‘포스트’의 신조류와 함께 그동안의 수세를 만회할 수 있는 명분을 찾는 듯이 보였다”(강상현, 1993, 145~146쪽).

7) 이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지금도 자주 언급되는 피스크 류의 ‘포퓰리즘’이다. 그러나 이 같은 엘리트주의/포퓰리즘의 이분법은, 구조·이데올로기/경험·실천, 이성/정서, 사회/개인, 거시/미시, 근대/탈근대, 심지어 칸트/니체 등으로 변주·확장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램시’처럼 양 극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있다.

비로소 소비의 문제를 크게 다룰 수 있었다(Murdock, 1989). 그러나 “사회적 조정이 어떻게 문화적으로, 그래서 직접적인 물리적 강제 외의 수단에 의해 확보되는가”(Garnham, 2000, p.110)를 기본적 문제의식으로 삼는 정치경제학은 저항성이나 단절, 문화적 실천 등을 강조하는 문화연구와 같을 수 없었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은, 문화연구가 제기한 수용자의 능동성을 정치경제학은 관행적·억압적 정체성의 수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문화산업론이나 좌파적 그림시의 관점을 받아들여 ‘피지배’와 ‘능동적 동의’를 양립 가능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Garnham, 2000; Gunster, 2004).

정치경제학이 소비를 보는 관점은 그것이 무정형적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패턴화되어 있다고 보는 점이다. 즉 수용자는 다양한 사회적 균열(특히 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 불평등)에 따라 그 문화소비가 구조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이는 생산에도 영향을 미쳐 생산과 소비는 상호적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계급·권력 불평등과 문화적 생산·소비의 일정한 피규정관계에 있고, 따라서 변화는 ‘앞’에서부터 도모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논리적으로 도출된 전제에 불과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치경제학에는 이러한 절차를 진행시킬 방법적 도구가 없다.<sup>8)</sup> 몰리(Morley, 1996)가 커런의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그렇다면 “수용자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했던 반문에 대해 정치경제학은 답하지 못하는 것이다. 몰리가 자신의 연구를 통계적 방법으로 재해석해 자신이 처음 주장한 것보다 소비가 정치경제학의 주장(사회적 위치에 따라 구조화되어 있다)에 더 가깝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에 기꺼이 동의하는 것(Kim, 2004; Morley, 2006)도 정치경제학의 자장과는 무관한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8) 이를테면, 대중 속에 존재하는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등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와 생산과 소비가 수미일관하게 돌아가는 과정을 관찰해서 보여줄 수 있을 방법적 도구를 말한다(그래서 모스코는 정치경제학과 에스노그래피를 연결시킨 펜다커를 높이 평가한다. Mosco, 1996/1998).

문화연구의 발흥과 맑스주의 비판연구의 퇴조 사이에는 모두 나름의 학문적/현실적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영국에서의 신수정주의가 나름의 현실적·학문적 이유에 의해 뒷받침된 것처럼 한국에서의 소비로의 전환 역시 현실의 보수화와 학문적 타협에 의해 이루어졌다. 만약 생산과 소비, 거시와 미시, 구조와 행위를 결합시키는 ‘총체적 연구’(Deacon, 2003)가 하나의 궁극적 지향점이라면, 생산에 대한 과도한 주목에 의해 가려진 수용자를 복권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다.<sup>9)</sup> 그러나 한국에서는 비판패러다임의 문제의식이 제대로 계승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복권이 이루어짐으로써 생산·거시·구조와 대립된 소비·수용연구가 정착될 수밖에 없었다.<sup>10)</sup>

뒤늦게 한국의 정치경제학에서도 수용자의 공백은 나름의 큰 문제로 포착되었다(이남표·김재영, 2006). 이들은 특히 지금의 커뮤니케이션이 개방화·민주화·유비쿼터스화·탈대중화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미디어가 수용자와 맺는 관계”(206쪽)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이들에게 자유주의나 문화연구가 내세우는 ‘시장’이나 ‘능동적 수용자’는 대안이 될 수 없고, 심지어는 공영방송의 몫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서 정치경제학의 일 분파의 주장인 수용자상품론도 비판적 검토의 대상으로 삼는다. 지금의 문제는 ‘생산과 소비의 상호결정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시장과 소비자의 괴리가 확대되는 현상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 고도로 확대된 네트워크와 시민적 연대 사이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인데, 지금

9) 첸(Chen, 1996)의 제안대로 지난 연구들에서 생산, 이데올로기, 지배 등으로 이루어진 사고들은 감정(즐거움, 향유), 소비, 담론, 표현, 욕망 등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필요한 전제는 “감정을 비이성적인 것으로 다루지 않는 만큼 이성 또한 (일정 부분) 비합리화시키는”(p.315; 괄호는 인용자) 공평한 태도이다. 또 소비를 미시적인 것으로 여기고, 거시와 미시 사이를 현실과 비현실로 치부하는 태도는 물리의 지적대로 행위와 구조 사이의 상호구성적 관계를 부인하는 것으로 생산적인 결론으로 이어질 수 없다(Morley, 1996).

10) 이전 문제의식의 ‘보완’이 아닌 ‘대체’로 등장한 이 점이야말로, 문화연구가 자주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주 5 참조).



까지의 안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대체적인 결론이다.<sup>11)</sup>

최근의 현실이 시장화·개인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과거 스타일의 공익·대중·규제정책에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화·유비쿼터스화가 반드시 시민·연대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며 민주주의와 시장이 맺는 양가적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장이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 해도 늘 같은 정도와 형태로 그런 것은 아니다. 조건에 따라 시장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요는 이러한 시장의 지배력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기제 — ‘공영방송’, ‘국가 규제’, ‘시민운동’, ‘대안언론’ 등 — 를 시장과 어떤 관계로 결합시킬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 과제는 정치경제학에 고유한 것으로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3. ‘무관심’과 ‘무능’: 생산(과정)/구조의 문제

문화·미디어의 생산 주체(자본과 인력 등)나 산물(텍스트), 생산조건이나 방식(테크놀로지, 분업 등) 등 이전까지 비판패러다임이 주력했던 부문은 주로 정치경제학으로 터울지워진 생산 쪽이었다. 이의 이면에는 ‘문화회로’(the circuit of culture)<sup>12)</sup>가 생산에 의해 결정된다는, 달리 말해 소비·수용이나 유통이 생산(더 좁게는 자본)에 의해 좌우된다는 “강력하게 환원주의적이고 총체적인”(Mosco, 1996/1998, p.190) 맑스주의의 ‘상품화’(commodification) 논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정치경제학은 산업·정책구조

- 
- 11)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말처럼 ‘시민성’의 의미 명확화나 수용자의 상품화과정에 대한 투명한 이해가 어떤 뚜렷한 해결책을 제공해줄 것 같지는 않다. 대안으로 제기된 문화연구와의 점점 모색(221쪽) 역시 구체적이지 않아 막연하게 느껴진다.
- 12) 이 개념은 생산과 소비 사이의 연계를 강조한 맑스의 착상을 기초로 하여 생산을 가운데 맨 위에 두고 소비, 규제, 텍스트, 주체(정체성) 등 다섯 개의 항목의 접합관계를 도식화한 것으로, 이들 사이의 접합은 결정적인 것이 아닌 가변적이고 우연적인 결과를 낳는다(Du Gay, 1997). 생산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치경제학적 발상에 비해 그 비중은 크게 줄어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의 거시적 트렌드(소유·통제구조의 변화, 국가·자본의 유착, 공영방송의 항배 등)에 치우쳐 이러한 추상화를 ‘상승’시키는 구체적인 연구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정치경제학이 뉴스조직의 경제적 구조와 뉴스과정의 결과를 직결시키면서도 정작 그 연관과정은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블랙박스’로 만들었다는 뉴스사회학자 섯슨(Schudson, 1989)의 지적은 이를 두고 한 것이다. 또 반대로 ‘생산과 ‘규제’ 같은 정치경제학의 전통적 주제에 주력해서 쓴 교본인 헤스몬드할의 ‘문화산업론’(Hesmondhalgh, 2002)이 오히려 문화경제학이나 문화사회학 같은 다른 부분의 연구에서 더 풍부한 작업개념 및 실증적 자료를 끌고 들어오는 것도 같은 맥락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정치경제학적 접근의 의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생산의 문제와 관련해서 나타난 최근의 지적 중 하나는 문화연구의 주요한 통찰 가운데 하나인 ‘차이’를 비판한다. 즉 문화연구가 수용자의 능동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활용하는, 생산자의 의도를 ‘배반’하는 수용자의 다양한 취향·수용의 ‘기호학적 민주주의’는 차이를 활용하는 자본의 전략변화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는 점이다(Gunster, 2004; Sayer, 2001). 이는, 시청자들의 해석적 힘이 그 텍스트를 생산하는 중심적 미디어제도들의 담론적 권력과 결코 동등하지 않다고 누누이 주장한 ‘온건파’ 문화연구자 몰리(Morley, 1996; 1998)의 주장을 새삼 상기시킨다. 만약 이러하다면 수용자의 능력은 여전히 자본의 자장 내에 머무는 셈이며 수용자에 대한 해석이나 수용자를 위한 전략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정치경제학의 ‘상품화’ 논리는 여전히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sup>13)</sup>

한편 소비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문화연구 진영에서도 생산과정에 대해 나름의 주의와 노력을 기울였다(Caldwell, 2006; Du Gay ed., 1997). 이들 문헌에 거론된 연구들을 모두 문화연구로 부를 수 있는지는 다시 따져보아야

13) 물론 이에 대한 여러 비판 역시 아직은 유효하다. 즉 상품화는 너무 추상성이 높아 ‘국면’에 대한 분석으로는 그저 ‘전경’(foreground) 정도가 될 수 있을 뿐 분석의 구체적 수단이 되기 어렵고(Grossberg, 2006), 그것이 상품이든 다른 무엇이든 그것이 가져오는 감정의 변화(감동, 즐거움 등), 즉 미학적 실체는 여전히 말하지 못한다.

할 문제이지만, 또 기존의 정치경제학과의 연속과 단절의 성격도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연구들이(적어도 문화연구의 테두리 내에서) 이론적으로 큰 결실을 거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지난 문화연구를 개관하는 자리에서 어떤 누구도 생산연구를 언급하면서 문화연구의 성과를 언급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논의의 무대를 한국으로 옮기면,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경제학이든, 문화연구든 비판패러다임 어디에서도 이 분야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을 강조하는 정치경제학이지만, 신문산업에서 나타나는 강고한 소유주체계모니에서 잘 볼 수 있듯이 ‘자명한’ 현실이 이론을 압도하고, 서구 이론에서 이어받은 일부 도식의 답습이 현장보고 수준에 머무르면서 답답함을 더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매체산업의 집중구조’, ‘외국자본의 한국지배’ 같은 것이 그러한데(김승수, 2005). 매체산업의 집중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여론시장의 지배’ 때문이므로 집중구조는 집중 자체보다는 ‘지배’로 나타날 수 있는 계기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런 중요한 고리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의 매체시장 비중(특히 한겨레나 KBS 등에 대한)은 매우 크지만, 삼성이 사적 기업이면서도 그 운신이 초미의 국민적 압력 속에 노출되어 있는 이중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그 비중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sup>14)</sup> 또 외국자본이 케이블TV 채널 등에 투자하면 무조건 그것이 ‘지배’나 ‘통제’로 간주되어야 하는 건지 같은 반문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판단은 결국 우리와 외부(주로 초국적기업)가 어떤 관련을 맺어야 하고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 개발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생산) 구조부분에서는 그나마 한동섭(2002)의 연구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독점의 형태 변화를 잘 추적하고 있다. 이 연구는 경쟁자/협조자, 국내/국외, 사업자 영역(매체) 등을 가리지 않고 전 방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네트워크형’을 새로운 독점의 유형으로 들면서 이의 효과로 국제시장에 대한 진입

14) 이를테면 KBS의 광고에 삼성이 10%의 비중을 가진다고 해서 삼성에 대한 비판을 KBS가 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장벽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해를 더욱 쉽게 도모할 수 있는, 독점의 계기나 형성과정에 대한 역사적 추이 등은 빠져 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또 네트워크형이 외견상으로는 분명하게 기존 주자들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듯 보이지만 실제 진입장벽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경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형이 생겨나는 가장 큰 이유가 기존 시장에 대한 새로운 미디어들의 과급력을 차단·포섭하고 기존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데 있으므로 네트워크의 말단에서는 신규 주자들의 배제력 못지않게 포섭력도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경제학에 필요한 것은 기존의 이론이나 접근방식에 대한 발본적 성찰과 논리적 추상을 구체화시키는(이른바 ‘구체로의 상승’) 사례연구이다.<sup>15)</sup>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치경제학에는 이러한 성찰이나 방법적 전환의 주장이 없거나 매우 약하다. 그리고 이는 비단 한국에서만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례를 들면, 영국의 대표적인 정치경제학자 머독과 골딩(Murdock & Golding, 2005)은 앞서 언급한 셋슨의 지적에 대해 이것이 오해라고 하면서 생산과정에 대한 정치경제학의 그간의 성과가 대단한 듯이 예시한다. 그러나 이 예시는 사실 그간의 주장이 가진 중요도를 전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양질에서 모두 현저하게 부족한 것이다(그들이 인용한 것은 두 개에 불과하다). 또 이남표와 김재영(2006)이 든 기존 연구들도 보기에 따라서는 국가(정책), 자본, 시장의 도식적 결합성만을 부각시킨 것일 수도 있다(그나마도 대부분 1990년대 이전 연구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적으로 말해 정치경제학이 주장만 앞세우는 도식성이나 단순성을 반성·극복하고, 논리나 방법의 구체화와 유연화, 다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다. 이 점과 관련해 고무적인 것은, 최근 들어 기존의 이론적 경직을 극복할 수 있는 틀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다는 점이다(김승수, 2007; Hesmondhalgh, 2002; Tunstall, 2008).

15) 구체로의 상승은 일정한 개념적 도식으로서의 추상이 얼마나 적절한가의 여부(또는 평면적인가, 복합적인가 여부)를 판가름해주므로 연구의 현실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밟아야 하는 절차이다.

물론 문화연구로 무대를 옮겨놓아도 대중은 변함이 없다(그러나 문화연구는 상대적으로 생산을 강조하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의 정도는 크지 않다). 즉 대체로 이 분야에서 문화연구로 스스로를 칭하는 연구(자) 중에서 생산, 즉 생산과정이나 조직, 생산인력, 테크놀로지나 작업방식 등에 대한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sup>16)</sup> 아마도 이 글에서 나중에 논의될 ‘PD저널리즘’에 대한 연구와 다큐멘터리·코미디(이오현, 2005; 2007), 뮤직비디오(양정혜, 2004), 매거진프로그램(연정모·김영찬, 2008) 등이 거의 전부이고, 범위를 더 넓히면 출입처에서의 기자와 취재원의 사적 친분을 탐구한 박동숙 등의 연구(박동숙·조연하·홍주현, 2001)도 포함될 수 있다.<sup>17)</sup> 이중에서 이오현의 연구들은 민속지학적 접근으로 인물현대사(KBS), 개그콘서트(KBS)의 생산과정을 밝혀준 흔치 않은 것인데, 아쉬운 것은 이 연구가 각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생산 환경에 대한 이해’에 대해 많은 정보를 주었음에 비해 내용분석과 병행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내용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또 프로그램에 작용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변별되지 않아 각 요인들이 마찰을 일으키거나 서로 간에 편입·협상되는 과정들이 관찰되지 않았고, 인터뷰 등을 통한 현장의 직접적 목소리가 상호체크 없이 다소 무반성적으로 반영되어<sup>18)</sup> 특히 인물현대사의 경우에는 마치 일선 PD ‘개인’의 능력이나 태도가 가장 큰 결정요인인 것처럼 비쳐지기

- 
- 16) 원용진이 2000년에 개관한 연구에서도 이 분야에 관련된 연구는 작가를 연구한 김훈순·박동숙(1999) 정도의 몇몇 연구밖에 없다. 원용진은 2005년도의 고찰에서는 “① 문화생산의 조건, ② 문화생산 관계, ③ 문화생산 수단, ④ 문화생산력 등에 다양한 논의들이 문화연구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했는데 지시대상이 불분명해 실체를 찾을 수가 없다(물론 이는 ‘생산’에 대한 필자와 원용진의 개념 차이일 수도 있다).
- 17) 사실 이러한 연구들을 모두 비판패러다임 범주에 넣을 수 있는지는 ‘민속지학’(또는 민속학?; 용어도 아직 명확히 통일되어 있지 않다)과 ‘참여 관찰’ 사이의 거리만큼 미묘한 문제이다. 이 점에서 민속지학의 방법적 의의는 여러 면에서 재검토할 여지가 많다(수용자 연구를 중심으로 한 것이지만, 나미수, 2005 참조).
- 18) 특히 칼드웰(Caldwell, 2006)은 이 점이 비판적 문제의식을 실종시키고 제작진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잘못된 연구로 귀결될 수 있는, 이런 연구방식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으로 보았다.

도 한다.

이러한 생산/구조연구의 부진은 비판적 정책연구 전체로 파급되어 뉴미디어·정책연구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서도 비판패러다임의 정책 개입 정도는 크지 않다. 물론 ‘슬로건’은 많다. 이를테면, 문화연구자인 전규찬(2007)은 “현재의 미디어/기술을 자기 대화 또는 자신과 동일한 규칙을 공유하는 사람과의 대화로서의 (권력의) 선전의지로부터 탈구시켜 교통 공간적 사회성 회복을 기획하는 다중의 언론의지와 절합시키는 능동적인 전유의 운동학”(308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미디어구조나 이를 가능케 하는 구체적인 전략이 무엇인지는 전혀 말하고 있지 못하다. 그가 말하는 미디어/기술의 ‘바깥이 아닌 안’, ‘인·민의 공유화’, ‘지향과 지양의 이중 전략’ 등의 주장으로 미루어 기존 구조의 내부에서부터 일정한 변화의 계기를 발견하려는 취지 정도만 이해가 될 뿐, 여러 관점에서 본 동어 반복적 수사나 현란한 개념어들을 걷어내고 나면 당위만 남는다.

또 문화연구의 전체적인 문화정책 노선 또한 많은 논의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는 이상길(2004)이 원용진(1997)에게 제기한 것을 강명구(2004b)가 계급문화적 관점에서 다시 재제안한 다음에서 잘 드러난다. 이상길(2004)은, 일상적 문화교육에서의 나쁜 것과 좋은 것의 ‘구분’을 문화연구가 주장하는 대중의 취향이나 수용에서의 ‘차이’와 어떻게 변별해서 볼 수 있을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대해 원용진은 나쁜 것과 좋은 것을 선별하고 ‘좋은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을 인정하지 않는 권력의 지배성을 지적하면서 문화적 ‘차이의 정치’의 정당성을 말했지만, 강명구는 “‘길거리... 아이들’의 삶의 조건과 이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간과와 저항, 타협과 순종의 과정을 드러내고)”(184쪽), 이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느냐의 문제 곧 계급적 ‘불평등의 정치’로 이를 인식한다. 차이의 정치가 학교(계급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는)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랩(나름대로의 문화적 실천)을 하는 아이들의 저항을 중시한다면, 이상길이 말한 좋고/나쁨에는 학교가 가지는 근대적 가치에 대한 나름의 옹호와 ‘좋은 것’에 대한 불가피한 선별의 필요성이,<sup>19)</sup> 그리고 강명구의 주장에는 학교교육과 거리 음악을 두고 주체적

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유무가 초점이 된다. 그리고 사실 이상길의 이론적 ‘해결책’은 이러한 저항/가치/권리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인식틀이다.<sup>20)</sup> 지금의 문화연구는 이론적·정책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같이 언급될 필요가 있는 것은 문화연구의 생성의 욕망을 여기서의 생산과 연결시킬 필요성이다. 원용진(2005)이 한국 문화연구 발전 과정을 추적한 것에 따르면, 한국 문화연구는 자연스러운 문제의식의 심화로 이데올로기에서 권력, 그리고 욕망으로 변화한다.<sup>21)</sup> 국가/자본에 치우친 초기의 지배이데올로기연구가 미시적인 일상·지식의 권력으로 확대되었고, 이것의 비판성 또는 부정성이 반작용을 불러와 적극적 의미를 지닌 탈주의 욕망론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욕망론의 시기에 이르러 문화연구는 한층 더 복잡하고 불투명한 모습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데올로기, 권력, 그리고 욕망을 절합하여 한 이론으로 엮는 것을 과감하게 시도했기 때문이며, 이는 서구의 것과는 다른 한국 문화연구의 특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사례로서 든 연구들은 이러한 욕망을 구체적인 생산조건(단순한 프로그램 재현 외에 생산인력, 과정, 제도 등)과 연결시킨 것이 거의 없다. 이 점은

19) 물론 랩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다면 좋고/나쁨이 대중장르에도 적용될 수 있고(그러니까 랩 일반이 모두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랩’과 ‘나쁜 랩’이 있는), 이처럼 대중문화의 의의가 공식적으로도 인정된다면 양자는 화해의 길을 걸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 랩이 과연 랩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을지의 의문이 남을 것이다.

20) 범위를 넓혀 보면, 차이는 취향이나 즐거움 등과 관련된 수평적 차원의 문제 인식으로(랩의 미학적 가치를 인정해 학교교육에 준할 수 있는 나름의 문화적 장르로 간주하는 것 같은), 불평등은 지배/저항과 관련된 수직적 차원의 문제로 볼 수 있고, 매우 분명하게도 양자는 공존하고 있고 문제 해결 역시도 양자적 인식이 공유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점과 관련해 전규찬(2004)은 양/질을 다수자/소수자로 풀어보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나 이에는 정작 우리가 ‘질’을 떠올릴 때 생각나는, 다수자/소수자 문제를 횡단하면서도 이와 상대적으로만 관련이 있는 미학적 차원(‘왜 우리는 감동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배제되어 있다.

21) 그런데 그가 사례로 든 연구들이 시기적으로 문제의식이 변화되는 과정과 일치하지 않음은 더 정당한 다음의 논의를 위해서도 꼭 지적될 필요가 있겠다.

적어도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화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아직은 무관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점을 반증한다.

이러한 무능과 무관심은 정치경제학의 결정 테제만큼은 아니라 해도 텍스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미디어제도의 담론 권력이 온전하게 배어 있는 생산·정책부문을 경시하게 되는 큰 오류를 낳을 수 있다. 사실 신수정주의 이후 소비 강조의 논리는 생산과 소비, 구조와 행위 사이의 상호구성적 관계를 넘어 ‘소비결정론’으로 치닫고 있지만, 이의 문제제기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 비판연구의 사고틀은 분명하게 대안을 기다리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해 모스코(Mosco, 1996/1998)가 기든스의 구조화이론을 받아들이고 방법론의 다양화를 꾀하는 것은 나름의 중요한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는 나중에 다시 살펴볼 근대주의/탈근대주의의 결(경)합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 4. 현실에 대한 개입: 국면주의의 침체/시도

문화연구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 중의 하나인 그로스버그(Grossberg, 2006)에 따르면, 문화연구는 맑스주의 또는 더 크게 근대주의의 보편주의나 본질주의, 환원주의를 비판하면서, 국면주의(conjuncturalism), 접합(articulation) 등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 여기서의 국면(주의)은, “다양한 실천(또는 관행들)과 투쟁 및 협상의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잠정적 균형 또는 구조적 안정을 추구하는, 여러 축과 면, 규모에 따라 갈라지고 갈등하는 사회구성체(를 주목하는 것)”(p.4; 괄호는 인용자)으로 정의된다. 이것이 탈근대적인 이유는 이 사회구성체가 주축이 없고, 특수·잠정적이며, 우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국면을 형성하는 접합 개념에서 더 잘 드러나는데, 그것은 “어떤 조건하에서 이데올로기적 요소들이 어떻게 하나의 담론 내로 서로 통합되느냐에 대한 이해의 방식, 그리고 그들이 어떤 특정한 국면에서 어떤 정치적 주체로 접합되거나 되지 않느냐에 대한 물음의 방식”(Hall, 1996, pp.141~142)으로 정의된



다. 다소 좁혀 말하면, 접합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요인들이 특정 시점(앞서의 ‘국면’)에서 하나의 구성체로 결합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별로 관계없었던 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 시장이론이 어떻게 결합되어 신보수주의로 ‘상식화’되는가 같은 것이다.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록 음악과 사회적 저항이 결합해서 저항의 감정선을 만들어내는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sup>22)</sup>

문화연구자들에게 이러한 국면주의는 대처주의를 예고했다고 평가받는 『위기관리(Policing the Crisis)』(Hall et al, 1977)가 맑스의 보나파르티즘, 그람시의 시저리즘에 준하는 ‘권위주의적 민중주의’(authoritarian populism)를 제기한 하나의 ‘정전’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국면주의적 분석은 이것에 그칠 뿐, 성과가 이어지지 못한다. 한국의 문화연구자들도 앞서의 『위기관리』 같은 새로운 체제의 등장과 관련된 국면주의분석은 시도하지 못했다(유선영, 2004). 노무현 정부하에서 벌어진 ‘언론전쟁’을 한국 언론의 구조변동과 연관시킨 강명구의 분석(2004a)은 국면주의를 표방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식에서는 이에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23)</sup>

이 글에서 강명구는 김대중 정부의 언론개혁 선언 이후 벌어진 언론 사이의

- 22) 필자가 보기에 이 국면주의는 맥레넌(McLennan, 2006)이 주장하는 대로, 그 어떤 요인에도 미리 주어진 ‘특권’이 없이, 다양한 사건들과 요인들(세력, 집단, 이념, 적대 관계 등)을 배열해놓고 그 사이의 선후, 인과와 경중을 따져 ‘그럴듯한 기술’을 도모하는 일종의 탄력적 ‘종합’(colligations) 같은 것이다. 따라서 그로스버그의 해명대로 이는 흔히 알려진 것과 반대로 경제나 생산, 구조의 폼하도 아니고 이데올로기주의도 아니다. 다만 정치경제학이 하는 방식(생산/경제결정론)으로 생산이나 경제를 취급하지 않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화연구 내의 경제연구가 풍부한 결실로 이어진 것은 아니므로 정치경제학의 비판이 전혀 근거가 없지도 않다. 문화연구의 대중은 여전히 텍스트/수용자라는 정형화되었지만 체계화된 틀에 만족해 있는 것이다.
- 23) 이 점과 관련해 다른 글에서의 강명구(2004b)가 했던 저널리즘 등으로 문화연구의 외연 확대 필요성은 국면주의로 미루어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그렇게 될 경우 ‘문화’ 연구로서의 정체성이 흐려지는 약점이 있다. 물론 한때 버밍햄이 그랬던 것처럼 문화연구가 (반주류)사회학의 기치를 유지한다면 이 점은 매우 필요하지만 최근의 영역화·구획화 경향은 이를 강력히 제어하고 있다.

갈등을 ‘언론전쟁’으로 규정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한국 저널리즘의 위기를 사회구성, 언론산업, 조직 및 (기자)집단의 정체성, 뉴스 담론의 층위 등 네 가지 층위로 나누어 검토한다(이 글에서는 마지막 층위는 제외). 시장 우위의 이데올로기, 약탈적·기업포획적 시장화, 신뢰와 연대감이 사라진 조직문화 등 한국 저널리즘은 제도-구조-조직-사람 등 모든 층위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개혁은 ‘당사자들의 자발적 의지와 성찰’이 필수적인데, 내부에서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으니 외부에서 시도하는 언론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아마도 이 글만큼 다차원적으로 위기를 잘 분석하고 있는 연구도 흔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의외로 많은 논쟁거리를 제공한다. 먼저 이 글은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중시하면서 여당과 야당의 차이는 정파적인 것으로 폄하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도 시장의 성격을 나눈 대로 시장과 반시장의 차이가 두말할 것 없지만, (여·야에 대응시킬 수 있는) ‘약탈적·기업포획적 시장’과 ‘규제된 시장’과의 차이도 특히 민주주의의 연륜이 짧은 한국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상업주의를 들어 조선일보/한겨레, 중앙일보/MBC의 차이가 없다는 대목에서는 탈정치화와 정파화를 같은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의문을 낳는다.

다른 한편으로 안티조선운동은 조선일보가 지배헤게모니의 보루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수시로 ‘색깔’ 공격의 전선에 나선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비판과 공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벌어진 운동인데, “...헤게모니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태를 보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한 신문의 편향적 보도행태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333쪽) 그 운동이 실패했다는 주장은 조금 더 부연설명이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한다.<sup>24)</sup> 신문의 사유화를 제한하기 위해

24) 이 글은 아마도 ‘조선일보를 너무 선불리 건드렸다’는 것으로 판단한 듯 보이는데 조선일보는 ‘사상 검증’의 형태로 자신이 직접 나서 공격의 선봉에 섰기 때문에 상대방은 침묵이 아니면 같은 방식의 반박이 불가피했다. 물론 이는 조선일보 측의 전략일 수도 있다. 안티조선운동은 지금에 이르러 다시 곱씹어봐야 할 여러 측면을 갖고 있지만, ‘신문’을 상대로 한 운동의 어려움을 새삼 느끼게 만드는 사례가 아닌가 한다.

지분을 제한하지는 주장은 적은 지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업지배가 가능한 현실이 엄연함에도 꾸준하게 제기되는 것인데, 단순히 한 기관이나 단체의 잘못된 노선만으로는 치부하기 어려운, 강력한 소유주체계모니가 작동하는 한국 신문의 특수한 현실도 같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국면주의와 관련해 여기에서 거론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 하나는 2004년 벌어진 탄핵보도 논쟁이다(원용진 외, 2008; 이민웅 외, 2006). 이 논쟁은 크게 보아 저널리즘의 규범, 더 좁게는 공영방송의 규범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큰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다. 탄핵방송을 비판하는 한 쪽은 규범의 훼손을, 옹호하는 다른 한 쪽은 규범의 상대성을 들어 서로를 반박한다. 비판패러다임의 입장에서는 규범의 정당성을 믿고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전자보다는 “역사성 안에서 보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저널리즘의 숙명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기술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원용진 외, 2008, 89쪽)고 하면서 이른바 정상저널리즘의 해체까지 나아가는 후자의 주장이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책은 먼저 뉴스 공정성을 구성하는 기존의 세 가지 하위범주, 즉 사실성, 윤리성, 이데올로기의 위계화를 시도한다. 오랜 권위주의를 거쳐 지금도 다원주의사회로 볼 수 없는 한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세 가지 범주는 동등하지 않고, 이데올로기 검증이 저널리즘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주된 축이 되고 사실성과 윤리성은 부차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당시의 보도는 “저널리즘 장의 지배자가 되길 욕망하는” 방송이 기존의 패자인 신문에 대항해 방송 내부의 아비투스(習俗)를 교체하면서 한국사회에 적절한 역사성에 입각해 “스스로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결과”(209쪽)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생각해봐야 할 거리가 적지 않다. 우선 이 글의 입장대로 공정성을 ‘약자의 편에 선 대항이데올로기’로 본다 해도 당시 정부 권력을 과연 약자로 간주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주된 축’(또는 이데올로기가 공정성의 하부요소가 아니라 공정성을 작동시키는 공정성의 조건)이라는 주장이라는 표현이 다른 부차적 지위(사실성과 윤리성)를 무시

해도 된다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또 역사성의 문제에서도 “과연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본 역사성이여야 하느냐”라는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작 별 대답이 없다.

이 책이 파악한 탄핵보도의 성격은 규범의 침해 여부에 매몰된 비판 측의 진단에 비해 방송 내부의 관점에서 ‘왜’와 ‘어떻게’를 풍부하게 설명해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의 정당성을 따져볼 수 있는 기준, 달리 말해 그것이 해체해놓은 규범의 재정립 — 공정성이 조건인 규범은 어떻게 정립될 수 있는가, 이는 기존 규범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규범은 불/필요한가, 규범의 기계적 적용과 탄력적 적용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방송의 아비투스 변화와 공영방송의 이념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 규범은 신문과 방송에 차이가 있는가 등 —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답을 찾기 쉽지 않다.<sup>25)</sup> 언론의 객관성 이념이 가지는 약점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그 이념이 가지는 ‘조절 원리’로서의 장점들을 무시할 수 없다(Lichtenberg, 1996)고 볼 때 이러한 공백은 빨리 채워져야 하는 부분이다.

## 5. 끝없는 정체성 확인/양적 담보: 저항성의 문제

많은 문화연구자들에게 제도화·정전화된 지금의 문제의식이나 연구 소재, 글쓰기 방식 등이 문화연구의 ‘정신’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우리만의 것은 아니다. 그로스버그가 미국 문화연구를 비판했던 가장 큰 이유 역시 문화연구가 대학 내, 특정 학과 내로 제도화·영역화되면서 일종의 방법론

25) 이를테면 이 글은 담론의 공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본권으로 확대하지는 이준웅(2005)의 주장을 다원주의적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거부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를 인정할 경우 이 글이 주장하는 역사성이 담론의 공정성 기준에서도 편파성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헤게모니개념에서 힘이나 경제력 못지않게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보편을 (적어도) ‘가장 할 수 있는 정당성인데 공정성보다 역사성이 더 ‘지도력’/‘합의’를 도모할 수 있을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이다.

또는 논문구성 방식 등에서 정형화된 틀이 나타나고 이 점이 문화연구의 본령을 사실상 해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Grossberg, 2006).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문화연구가 문화·연구의 주류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정체성이 오히려 분명해지면서 나타난,<sup>26)</sup> 그러니까 일종의 ‘성공의 위기’로 나타나는 경향이 지적된다.<sup>27)</sup> 문화연구의 양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다양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윤선희, 2003; 이상길, 2004; 유선영, 2004; Kang, 2004).

주류 이론처럼 이론 → 가설 → 관찰 → 경험적 일반화 → (다시) 이론의 단계로 이어지는 가설연역적(또는 법칙연역적, 포괄법칙적) 방법을 ‘표준’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해도 이와 유사한(물론 단계가 이처럼 많거나 경직되어 있지는 않지만) 절차가 고착될 수 있는 조짐은 여러 곳에 보인다. 만약 이러한 절차가 현상을 선별하고, 절차 자체의 비중이 단순한 글쓰기의 틀 이상을 넘어 ‘성화’(sacralization)(김웅진, 2001)될 가능성을 보인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점은 서구이론이 주로 포착하고 있는 현상과 유사한 현상이 연구대상으로 포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배제되면서 한국사회의 보다 다양한 요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탐구는 지연된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이기홍, 2006). 전자의 경우 대개는 앞서 제시된 ‘이론적 배경’이 현상에 대한 분석을 모두 포괄해버려 분석의 결과는 사실상 동어반복에 그치게 되며, 결국 남는 것은 서구 이론이 될 뿐이다.<sup>28)</sup>

26) 이 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임영호(1998)가 지적한 다음과 같은 영역주의이다. “영역화 운동은 구성원에게 정서적 일체감과 귀속감을 주는 상징 역할을 했고 내부의 재편성, 내부적 자아비판보다는 영토 확장, 체계화, 계보화에 치중하는 역할을 조성했다”(9~10쪽).

27) 이 점과 관련해 문화연구는 ‘문화에 관한 연구’를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좌파 지식인의 문화정치학의 기획’ 또는 ‘(신)좌파적 사상과 정치적 흐름 속에서 형성된 바로 그 문화연구’로 한정하길 바라는 이영주(2006)의 제안은 이러한 확대·영역화/비판의 상반된 분위기를 잘 반영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더해 상투와 도식에 빠지는 민속지학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그 자체가 꺾어진 연구인 이기형·임도경(2007)의 연구 역시 그러하다. 물론 이들 또한 성공에서 오는 위기의 한 징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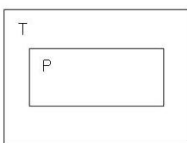
28) 이는 다음의 그림으로 도식화시킬 수 있다. <그림 1>은 이론이 현상을 완전히

문화연구와 관련해 제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저항선은 바로 이러한 행태를 비판하는 문화연구, 곧 탈식민주의가 가진 서구중심성에 대한 양가적 저항이다. 이를 다소 아이러니컬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유선영(1998)이다. 유선영은 한국의 문화연구가 서구 보편주의의 함정에 빠져 우리의 독특한 근대성에 천착하지 못함을 비판하지만, 정작 자신은 탈근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탈식민주의에 이끌려 과거로 회귀한다. 이 사례는 우리가 서구 이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를 밝혀 보여준다고 생각되는데, 첸(Chen, 1998)이 맑스를 처리하듯 탈식민주의(더 크게는 탈근대주의)를 기존의 서구적 보편에 대한 ‘외부’ 또는 ‘전복’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의존은 서구중심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보는 방식이 있다. 그러나 조희연(2006)은 여기에서도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서구중심성이 나타난다고 본다. 하나는 그것이 지식인의 특권적 담론이 됨으로써 역시 ‘하위주체들(우리들!)의 침묵’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이들이 서구적 담론에 대한 기존의 저항담론조차 해체해버림으로써 해체론적 논의를 통한 식민주의의 현대적 재생산을 낳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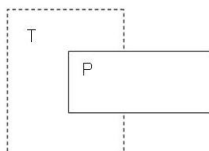
그렇다고 이를 본질론적으로 판단해 외국의 이론을 무조건 배척한다거나 우리의 역사적 사례만을 무작정 연구해야 할 필요는 물론 없다. 김경만(2007)

포섭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본문에서의 언급처럼 분석의 결과로 이론만 남게 된다. 이때의 현상이란 이론의 단순 투영태일 뿐이다(곧  $T \rightarrow P$ ). <그림 2>는 이론이 현상에 대해 일종의 장식처럼 붙어 있는 경우이다. 여기에서는 아무리 연구가 축적되어도 개념화나 이론화가 되지 않고, 현상에 대한 기술만 남는다. <그림 3>은 처음 출발할 때의 이론( $T_1$ )이 현상( $P=P_1+P_2$ )을 만나  $P_2$ 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정하게 재맥락화되어 다시 이론  $T_2$ 로 거듭나는 과정이다(따라서  $P_2$ 를 적극적으로 찾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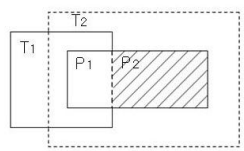
<그림 1>



<그림 2>



<그림 3>



의 주장대로 설사 우리의 형벌제도를 연구한다 해도 이것에 접근할 수 있는, 즉 이것을 개념화·이론화하고 분석할 수 있는 틀이 없을 경우에는 주 28, <그림 2>의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조순경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서구의 이론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오히려 더 ‘적극적’이어야 할 것을 주문한다.<sup>29)</sup> “우리는 전보다 더 서구의 이론을 필요로 한다. 오히려 시안에 따라 서구 이론은 우리의 현실을 드러내고 분석하는 데 그 어느 이론보다 적절한 도구와 틀이 될 수 있다”(조순경, 2000, 185쪽).

한편, 전규찬(2005)이 문화연구에 대한 메타비판이 낳은 여러 다양한 주문들에 대해 그것이 기껏 맑스적·근대주의적 사고의 복원(이를테면, 계급적 범주의 복원, 비판적 정치경제학과의 접합, 정책에 대한 개입을 요구하는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적 연구의 필요성 등)에 그치는 데 반발해 다양한 관계의 피권력자로 정의되는 소수자성, 곧 실천성을 새삼 환기시키는 것은 매우 ‘영국적’이라 할 수 있고, 그 발상지에 문화연구의 일정한 본질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제안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소수자 문화운동론은 기왕의 문화운동과 비교해 표현주체(사실상 객체) 및 표현범위, 해석양식 등에서 다양화되는 큰 성과를 얻고 있는 데 비해 실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따위의 장식적 슬로건 이상으로 운동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소수자 범위의 문제이다. 그의 소수자는 사실상 비(피)권력자 전반을 아우르는 말로, 외연이 너무 넓어 ‘사회적 배척’을 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다. 즉 만약 이 소수자들을 위한 표현매개나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면 이들 사이에 불가피하게 선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이 글이 주장하는 ‘소수성들의 차이 나는 이해관계들의 고른 고려’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방송의 특정 시간대를 두고 노인/소녀 두 소수자집단이 자신의 표현을

29) 그러나 유럽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해 ‘우리’의 문제의식에 대한 찬양, 외국 것의 재맥락화의 필요성으로 끝나는 이러한 문제제기조차 ‘상투적인 것’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논의구조가 유사한 반면 결실은 의외로 미약하다(아시아에서의 상황에 대해서는 Alatas, 2006 참조).

원할 경우 같은 때를 말하는데(물론 자원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는 전혀 이런 문제가 없다), 이럴 때 가장 효율적인 결정방식은 당사자 외의 다른 소수자의 지지가 어느 쪽에 더 많으냐를 따져보는 ‘다수결’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아닌 다시 다수자방용으로 돌아가고 마는 모순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소수자의 개념 설정에는 단순한 차이와 복수주의<sup>30)</sup>를 넘어 연대와 사회적 편성에 기초한 ‘적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사고는 Karppinen, 2007).

이러한 소수자 중심 모델은 결국 ‘다수자=전체’가 아닌 ‘소수자+소수자=전체’로 만들자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도 전체에서 ‘공’(public)은 배제될 수 있어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고른 배려’ 외의 기제가 여전히 필요하다. 또 만약 일부 자유주의자들(Young, 2001)의 주장대로 소수자들의 주장 및 표현이 ‘공약불가능하다’면 이들 소수자들은 스스로에게 말하고 듣는 현상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할 텐데, 이는 오히려 소통을 방해하고 ‘계토화’를 더 많이 진행시킬 뿐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소수자 사이의 대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실 소수자와 다수자 사이의 대화이다. 이러한 자기표현을 위한 소수자들의 노력을 프레이저는 ‘서발턴 대항공중들’(subaltern counter-publics)이라고 부르는데, 그녀의 주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중들의 장을 따로 마련하는 것 외에 이들이 자신의 차이를 넘어 그들 모두에게 관심이 있는 주제를 차별 없이 다수자에게 말할 수 있는 장<sup>31)</sup>의 중요성이다(Fraser; Born, 2006, p.115에서 재인용).

정통 맑스주의에 가까워 민주화 이후에는 (적어도 외형적 측면에서는) 뚜렷한 침체의 길을 걸은 정치경제학이지만 사실은 현실의 변화(IMF위기, 신자유

30) 양적 다원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많은 ‘모든 다양한 것, 열려 있는 것=산’이라는 사고방식을 지칭한다(McLennan, 1995).

31) 물론 이 장의 목표는 “다른 것들을 갖게 만들지 않으면서, 차이를 가로지른 이해를 도모하는 것”(Young: Ferree et al, 2002, p.313에서 재인용)이다. 이 장은 선부른 합의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합의는 차이를 가치 있게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무시하는 것으로 되기 쉽기 때문이다.



주의의 득세, 소유주 해계모니 주류신문의 보수기지화 등)나 운동(언론개혁) 과정 등에서 나름의 필요성은 꾸준히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한 대로 정치경제학은 거시/구조 모델을 뒷받침하는 나름의 ‘중범위 모델’을 개발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심층·분석이 없고, 실증성이나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물론 앞서 ‘차이’에 대한 해석이나 독점의 유형 추적, 기존의 수용자론 비판 등은 정치경제학의 나름의 결실이라 할 만하다.

대안언론 논의는 이러한 정치경제학의 자장 내에서 앞서 본 소수자문화운동과 불가결한 관계를 맺는 데 비해 양측의 교류는 거의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대안언론이 주로 매체의 형식이나 관리, 수용자에 집중되어 있고, 문화운동은 주로 필요성, 내용, 미학적 표현 등을 주로 논의하고 있어 실천에서는 접점이 상당히 커 보인다. 대안매체의 정체성을 주류/비주류가 아닌, 매체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주체화’의 실천으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김은규(2005)의 연구는 현재의 논의에 이론적 방향성을 부여하는 장점이 있으나 말미에 제시한 대안의 (객관적) 요건은 이전보다 더 엄격한 것이어서 오히려 외연을 좁힌 감이 있다. 즉 자신이 스스로 되물은 대로 ‘한겨레신문을 대안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한 해답 찾기가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도 큰 이점이 없다.

## 6. 문화연구와 정치경제학의 화합 가능성

이론적 측면에서 문화연구는 홀(Hall, 1996)이 말한 바 있는 ‘생산적 절충주의’, 즉 다양한 학문전통과 연구로부터 최상의 것을 취해서 새로운 종합을 이루려 하는 선택적이면서 혼합적인 양식을 추구한다(물론 이 절충의 성패 여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영역 확대 또는 관점 확대 같은 ‘더하기 전략’<sup>32)</sup>(원용진, 2005)은 문화연구의 오히려 중추인 셈이며,

32) 그러나 이 ‘더하기’에는 원용진도 의식하고 있다시피 논리의 자연스러운 발전보다는 유행에의 편승 같은 외적 이유가 더 크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 또한 만만찮게

만약 이를 받아들인다면, 관점을 고정시켜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정체성을 해치는 역설적 결과를 빚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적극적인 절충성은 계급, 성, 지역, 세대, 인종/종족 등에 의해 다양하게 갈라지는 잡종적 텍스트들, 의미들, 목소리들의 융합 지평적 배치를 꾀할 수 있는 유력한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전규찬, 2005).

그러나 절충은 자주 자가당착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듀링(During, 1993)이나 그로스버그에 대한 맥레넌(McLennan, 2006)의 지적에서 잘 볼 수 있다. 듀링은 지금에 이르러 사회가 철저하게 탈중심화되었고 메타담론은 부정되었으며, 문화적 형식들은 파편화·비결정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지난 연대의 미디어/문화생산의 글로벌화와 그로 인한 집중의 일부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구조적이고 인과적인 사고를 거부하면서도 사실은 이에 의존하는 것이다. 즉 여기서의 ‘생산의 글로벌화와 집중’은 합리주의적 이해와 사회적 리얼리즘의 사고방식에 기반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보편주의의 거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탈근대적 국면주의가 보편주의를 거부하려 해도 그 실체나 범위가 분명치 않다. 대부분의 보편주의적 표현들은 사실 일정 시점의 일정 지점을 가리키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 둘 사이의 괴리는 불가피하므로 보편주의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 실체가 없다. 그로스버그 역시 역사를 투쟁의 산물로 보면서, 그 투쟁이 근본적으로 특수하고, 완전히 다른 ‘주관성들’(subjectivities)과 목적으로 구성되며, 어떤 공통적인 지평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 역시 사실은 역설적인 보편화, 즉 ‘한정되지 않은 보편화’(unbounded generalizations)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McLennan, 2006).

일정한 수준의 결정론적/인과론적 시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회학적

---

계기된다. 물론 이를 논리적으로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나름의 옹호에도 불구하고 학문 장에서 이러한 평가가 그치지 않는 이유는 한국 문화연구의 이론적 생산력(또는 생산적 절충력)이 매우 낮고(이상길, 2004),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적 혼성화’ 연구나 호주의 ‘문화정책’ 연구처럼 나름의 특색도 갖추지 못했으며, 어떤 시점에서나 다양성 또한 잘 유지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설명’의 목적을 앞세울 때, 문화연구의 ‘기술’ 행태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문화연구의 국면주의나 헤게모니는, 정치경제학과는 달리 생산에 주어질 수 있는 우선권 같은 ‘내용’이 없는 비결정의 상태를 추구한다. 그런 면에서 문화연구는 ‘이론적 모델’이 될 수 없다. “그것(문화연구)은 수많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표현하고 이것들이 밀접하게 상호연관을 맺는다는 관찰 외에 문화적 순환의 인과적 구조에 대해서는 어떤 일반적이고 적극적인 생각도 제시하지 않는 것”(McLennan, 2006, p.52)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정치경제학의 근거에는 잘 알려진 대로 외부의 현상이 우리의 인식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우리는 이에 대한 적절한 추상(이론)을 통해 객관적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는 ‘비판적 리얼리즘’이 자리한다(Murdock, 1989). 존재론과 인식론의 분리, 인과관계의 적용, 추상의 구체로의 상승 같은 절차로 특징지어지는 이 비판적 리얼리즘과 앞서 본 절충과 기술을 본령으로 하는 문화연구는 어울리기 힘든 것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존재론의 인식론으로의 통합(관찰자와 관찰대상의 분리불가능), 보편주의의 거부, 지식의 사회적 구성성 등을 주장하는 문화연구의 탈근대 인식론은 비판적 리얼리즘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그러나 만약 많은 한국의 논자들(유선영, 2004; 윤선희, 2003)이 문화연구(자)에 정치경제학(또는 구조를 중시하는 넓은 의미의 맑스주의 인식론)과의 화합을 권유하는 것(그 반대는 이남표·김재영, 2006)은 이 차이가 어느 정도는 극복될 수 있는, 적어도 양립 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 점의 한 가능성은 정치경제학의 혁신을 도모하는 모스코의 연구(Mosco, 1996/1998)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모스코는 자신의 인식론이 가진 결정 개념을 거부하고 인과관계를 ‘느슨’하게 하면서 구성주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치경제학의 입장 변화를 시도한다. 모스코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던 문화연구의 국면주의에 매우 근접한 것이다.

개개의 사회적 행위, 과정, 구조는 자기 고유의 특이성들을 지녔다기보다, 사회적 통일성은 물론 모순들과 갈등들을 내포하는 사회 장(場)의 한 부분으로서 서로

모순되고 갈등적인 힘들을 내포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서로 효율적으로 서로에게 작용한다. 이 결과는 어느 특정의 본질들로 환원될 수 없고 또 다양한 접합들과 균열들로 구성된 역동적인 사회장이다(Mosco, 1996/1998, p.178).

이러한 태도는 ‘중간’을 견지하는 홀의 헤게모니 용례에서도 잘 엿볼 수 있다. 우드(Wood, 1998)는 이를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지만, ‘관념론’과 ‘환원론’ 어디로도 갈 수 없는 홀의 중간주의는 지배/재생산의 개념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변화와 저항을 설명하는 적극적 노력으로 볼 수도 있다. 즉 홀은 문화연구에 맑스주의적 근거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는 다음에 살펴볼 근대주의와 탈근대주의의 차이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이렇게 쉽게 매듭지을 문제는 아니다.

## 7. 근대주의/탈근대주의 합의의 가능성과 필요성

챔버스(Chambers, 1986)의 언급대로 만약 탈근대주의가 한 시대, 즉 계몽주의적 합리주의와 그것의 형이상학적·실증주의적 변종의 종언을 말하는 것이고, 그 시대가 백인·남성·유럽 중심의 식민체제와 일정한 연관을 맺는다면 탈근대주의의 등장은 역사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면서 환영할 만한 것이 된다. 대체로 이를 주도했던 푸코를 비롯한 프랑스의 이론가군이 식민지(알제리)에서의 경험을 통해 근대(곧 식민주의를 하나의 본질로 하는)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시도했다는 것(Shome & Hedge, 2002)은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비판패러다임의 입장에서 볼 때, 탈근대주의의 기여는 이전의 맑스주의의 계급우선성에 의해 가려졌거나 주변화되었던 성, 인종, 민족, 지역 등의 모순을 부각시키면서 이전의 (근대적) 기획과 배치로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이 문제가 이전의 근대도 발견했던 문제이고, 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면 차라리 탈근대주의는 근대주의의

궁극적 완성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근대성에 대한 발본적 성찰은 곧 탈근대화의 기획을 동시에 작동시키게 된다는 이중적 문제 설정이 가능해진다(심광현, 2000).

1990년대 이후의 비판패러다임의 침체와 확대, 이론과 실천의 괴리를 지적 하면서 근대의 문제를 파고드는 탈근대주의의 문제제기를 오히려 한국의 압축 근대화가 가진 모순성을 해결하는 단서로까지 확장시키기도 하는 임영호(2001)의 문제의식은 이와 같은 인식과 연장선에 있다. 이를 받아들이면서 1990년대 이후에 오히려 현실에서는 계급적 문제가 더 심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유선영 또한 같은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이론적 해결을 주장하는 이상길(2004) 역시 이러한 근대/탈근대의 긴장관계를 궁극적 숙제로 놓으면서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인식론적으로 볼 때, 근대와 탈근대는 ‘협상’은 가능하지만 ‘회합’은 어려운 것이다. 이를테면 페미니즘 영역에서 근대주의는 한편으로는 여성을 억압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젠더가 억압받고 있는 현실을 일깨워주었고, 이에 비해 탈근대주의는 한편으로는 젠더를 부각시키고 본질주의를 거부하게 해주었지만, 역시 다른 한편으로는 이의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탈정치적 상대주의도 같이 들고 왔다(Fenton, 2000). 이론/현실의 영역이 각각 상반되는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에 대해 펜튼은 이론적 순수성을 위해 정치적 이념을 포기할 수 없다는 스피박을 따라 양자 사이의 ‘전략적 협상’을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맥레넌(McLennan, 2006)은 보다 근본적이면서 오히려 더 현실적일 수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양자 간에 일치와 차이를 분명히 하는 합의를 하는 이른바 ‘복합적 합의’(complex consensus)이다.<sup>33)</sup>

33) 이는 양자의 대표 격인 푸코와 하버마스 사이의 관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문성훈(2001)에 따르면, 우리는 합리성의 생산적 역할(하버마스)만을 근거로 합리성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도 없고 합리성의 권력효과(푸코)만으로 합리성 자체를 포기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있지만, 권력효과를 견제하면서도 현실구성력을 갖는 어떤 대안적 합리성 개념을 제시할 수 있다면 푸코의 비판을 합리성에 대한 자기반성 요구로

이는 양자 사이에 공통의 관심사를 두고 서로를 견주어 일치와 차이를 교차시키면서 이의 결실을 공유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다소 크게 말해, 이는 근대의 기획과 배치 속에 탈근대적 균열과 긴장을 만들고 이를 결(경)합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의 심층에는 자유, 인권, 합리성, 진보 같은 근대의 개념과 권력/지식의 관계에 대한 ‘성찰’, 집단·조직화가 가져오는 내적 억압에 대한 경계, 수평적 연대의 중시 같은 탈근대적 사유가 착종되어 있다. 이의 사례로는 미시적 문제제기가 거시적 입장을 반드시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는 수용자론(Morley, 2006), 또 자신의 패러다임에 없는 부분을 다소 기계적으로 보완시키기는 하지만 역시 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페미니즘(McLaughlin, 1999; Mosco, 1996/1998), ‘차이를 가진 일치’(differentiated unity) 같은 모순적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근대주의의 문제설정을 앞세우기는 하지만 탈근대를 적극적으로 소화시키고자 하는 입장에서 저항의 길을 찾는 제휴와 연대의 정치주의(Best & Kellner, 2001)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근대(공론장·계급문화)의 문제제기 속에서 탈근대(국면주의·탈식민주의)로 영역을 확장하는 강명구나 그 방향이 반대인 원용진 등도 이 구도의 일원이다.<sup>34)</sup>

이론적 측면에서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미르찬다니(Mirchandani, 2005)가 제기한 ‘경험론적 탈근대주의’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이 한 방편이 된다. 미르찬다니는 탈근대주의를 추상수준 및 기존 이론과의 관계에 따라 회의적

---

받아들일 수도 있다. 설정/성찰이 같이 간다면 합리성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이 성찰은 그 자체로 ‘내용을 가진’(substantial) 인식론적 전략이 되기는 어렵다(McLennan, 2006).

34) 첸의 ‘비판적 콜라주’(Chen, 1996) 같은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소 산술적이지만, 여러 민주주의 유형들의 동시적이면서 충분한 작동(심광현, 2000)으로 민주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 문제의식을 민주주의/미디어의 관계로 연계시킨 것은 베이커(Baker, 2002)의 ‘복합적 민주주의’ 모델인데, 이는 ‘행동주의민주주의’나 ‘구성주의’ 같은 탈근대적 급진주의로도 확장될 수 있다(조항제, 2005). 그리고 이는 매체시장에서 커런(Curran, 2002/2005)의 ‘철저한 민주주의미디어 모델’이 보여주는 것 같은, 공영방송과 여러 부문 사이의 ‘역할 분담’ 같은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다소 도식적이지만, 하버마스=공영방송, 푸코/들뢰즈=인터넷).

인 ‘인식론적 탈근대주의’와 절충적인 ‘경험론적인 탈근대주의’로 나누고 후자의 사례로 ‘시공간의 재조직’, ‘위험사회’, ‘소비자본주의’, ‘탈근대 윤리학’ 등 네 가지의 주제를 든다. 이중 ‘시공간의 재조직’, ‘소비자본주의’ 등은 이 글의 주제인 비판패러다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성·계몽 중심의 근대적(정치) ‘시민권’에 젠더나 사적 정체성·감성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문화적 시민권’ 개념(또는 같은 맥락에서 ‘문화적 공론장’ 개념), 정치경제학적 생산에 문화연구적 문제의식을 결부시킨 ‘생산문화’(culture of production) 개념(또 이의 한 부분으로서의 할리우드 같은 ‘생산 장소’ 개념), 근대적 시민과 탈근대적 소비자를 결(경)합시키는 ‘시민/소비자’ 개념, 생산에서의 ‘차별화’와 소비에서의 ‘차이’ 사이의 개념 차이, 공영방송의 미래적 개념 등도 이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또 실천면에서는 앞서 보았던 소수자문화운동과 대안언론운동, 노동계급의 문화운동을 결(경)합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실천적 노력들은 기존의 소모전적 논쟁을 넘어 근대와 탈근대 사이의 결(경)합 지점을 정확히 포착하게 하여 결실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

## 8. 요약 및 결론

현실의 장과 학문의 장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도 상당한 거리를 둔다. 1990년대 이후 현실사회주의가 패망하고 한국에서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학문의 장 역시 혁명/계급의 패러다임이 크게 위축되는 등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막상 그 시점에서부터 현실에서는 계급적 격차가 오히려 더욱 커지고 전면적인 위기가 닥치는 등의 아이러니가 빚어진다. 서구의 비판패러다임에서는 대처주의를 전후해 ‘수정’의 조짐이 커지고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탈근대주의의 분위기가 완연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이미 1970년대 초반부터 학문의 장에서는 예고되었던 변화이다. 서구와 한국이 유사한 호흡을 시작한 2000년대는 이러한 탈근대주의적 분위기에 대한 긍정/부정, 옹호/비판,

안주/확대 등의 물밑 싸움이 쉽 없이 벌어졌고, 문화연구와 정치경제학에는 각각 다른 형태의, 성공의 위기와 실패의 위기가 찾아왔다. 이 역시 현실의 변화를 반드시 동반한 것은 아니었던 셈이다.<sup>35)</sup> 양쪽 모두에서 정치경제학의 안티테제인 신자유주의·민영화·시장화가 기승을 부렸기 때문이다.

비단 소비자본주의 테제를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화연구의 ‘소비로의 전환’은 (적어도 지금 시점에 이르면)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전체적 변화와 발 맞는 나름의 적실성을 갖는 것으로 정치경제학은 이를 보다 진지하게 고려해 프랑크푸르트학과 이래의 테제인 (지배에 대한) ‘능동적 동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설명틀을 고안해야 한다. 문화연구 또한 몰리도 인정한 ‘구조화된 소비’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생산(과정)/구조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놓기 위해 애쓸 필요가 있다. 특히 ‘문화의 생산/생산의 문화’는 정치경제학과 문화연구가 공유할 수 있는 최적의 접점이 될 수 있다. 국면주의는 헤게모니 개념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시키면서 문화연구가 현실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유력한 통로인 데 비해 그간의 문화연구는 이를 등한시해왔다. 최근의 ‘언론전쟁’이나 ‘공정성’ 문제는 이러한 국면주의 연구(본격적인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를 촉발한 것을 계기로 향후에는 이의

---

35) 주지하다시피 현실과 학문, 더 크게 말해 존재와 인식은 서로 일정한 왜곡과 지체를 가지는데, 1990년대 이후의 한국사회에서 나타난 (인식에서의) 보수화와 (존재에서의) 계급적 양극화는 이의 적절한 예가 된다. 그러나 어떤 한 ‘주의’를 추종하거나 주창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의 변화와 그 주의의 주장이 상응하기 때문은 아니다. 한 주의에는 그 주의가 추구하는 세계관과 대안이 있게 마련이고 만약 이에 찬성할 수 없다면 설사 그 주의의 설명력이 크다 하더라도 그 주의를 따를 수 없는 것이다. 이를테면 1990년대의 서구와 한국에서의 (범)정치경제학파가 하버마스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사실상은 그의 핵심테제를 ‘왜곡’시키게 된 이유도 하버마스를 통해 정치경제학이 지향하는 ‘공적 소유’를 자본주의하(정치경제학식 대안인 사회주의가 아닌)에서도 가능하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영국 정치경제학의 공영방송에 대한 관점 변환(‘비판’에서 ‘대안’으로; 이에 대한 일부 리뷰는 조항제, 2003 참조)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이 점은 시장화의 득세와 정치경제학의 위상 저하가 같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에 이르러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시장화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정치경제학은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결실이 풍부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연구가 양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안정된 재생산 궤도에 오르면서 연구의 방향성이나 시각, 연구대상, 방법론 등의 여러 방면에서 그 정체성이 재검토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영역화는 체계화나 제도화의 문제와 병행되므로 진보적 문제제기와 ‘수혈’이 꾸준하게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나 호주처럼 나름의 특색을 만드는 것은 이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더욱 많은 고민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양적 담보에 있기는 하지만 현실이 오히려 그 필요성을 인정해온 정치경제학은 헤스몬드할 등이 보여주듯이 생산적 절충을 통해 중범위 이론에 대한 꾸준한 천착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제기할 수 있는 근대주의/탈근대주의 수렴의 가능성과 필요성은 이미 여러 곳에서 논의된 것이지만, 지금의 한국 비판패러다임에도 확인의 값어치가 작지 않은 ‘공감대’가 아닌가 한다.

과거 1980~1990년대 서구와 한국에서의 비판/실증 논쟁이 여러 논자들의 지적대로 많은 결실을 남기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데올로기연구의 문제의식과 실증연구의 방법론을 결합시킨 프레이밍 연구<sup>36)</sup>의 사례처럼 그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물론 논쟁이 직접 프레이밍이라는 성과를 낳은 것도 아니고, 그나마 우리 자신의 성과도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영역 자체는 양측의 문제의식이 얼마든지 가까워질 수 있고 또 생산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하나의 방증(傍證)이 된다. 이러한 영역이 2000년대의 문화연구와 정치경제학 사이에도 계속 모색되어야 하는데,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방향을 감안하여 ‘시공간의 재조직’, ‘소비자본주의’, ‘문화적 시민권’(또는 ‘문화적 공론장’), ‘생산문화’, ‘시민/소비자’, ‘차별화/차이’, ‘공영방송의 미래’ 등을 제안해보았다.

이 점과 관련해 매우 고무적인 것은 한국의 비판패러다임 연구자들 사이에 공론장이나 민주주의, 공영방송 같은 근대적 배치에 큰 틀의 공감대가 있다는

36) 물론 개별 프레이밍연구에서 비판적 문제의식의 수준은 일정치 않고 때로 실증적 효과연구의 한 부류로 전락되기도 한다. 캐리지와 뢰프스(Carragee & Roefs, 2004)는 이를 비판한다.

점이다. 일례를 들면, 소수자를 강조하는 전규찬(2006; 2007)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 또는 더 나아가 공론장이나 민주주의를 ‘폐기’시키지 않고 개입 가능한 지점으로 보는 점은, 자본의 지배를 경계하지 않고 시장을 다양성과 직결시키면서 공영방송을 비판하는 호주의 전형적인 페미니스트-포스트모더니스트인 자카(Jacka, 2003)와 크게 대조가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비판’이 어떤 정형화된 영역의 전유물이 아니고, 이론이 만들어지는 현실에 대한 개입 의지나 그로부터 생겨나는 문제의식에 더 어울릴 수 있다고 한다면 명시적으로 이를 내세운 가시적 성과 못지않게 인식 자체의 보편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매체 다양성’같이 민감한 문제에서 한국의 학자들 사이에 시장(상품)적 다양성의 전횡을 견제하는 비판적 다양성(소유·이념적 다양성) 개념이 나름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박주연·전범수, 2007)는 점은 나름대로 그간의 비판패러다임이 이룩한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 ■ 참고문헌

- 강명구 (2004a). 한국언론의 구조 변동과 언론전쟁. 『한국언론학보』, 48-5호, 319~349.
- \_\_\_\_\_ (2004b). 문화연구 메타비평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제기. 『프로그램/텍스트』, 11호, 177~189.
- 강상현 (1993). 한국 언론학 연구동향에 대한 비판적 평가: 최근의 패러다임 논쟁과 그 불완전 해소를 중심으로. 『사회비평』, 10호, 122~153.
- 김경만 (2007). 독자적 사회과학 어떻게 가능한가? 몇 가지 전략들. 『사회과학연구』, 15권 2호, 48~93.
- 김승수 (2005). 한국매체산업의 계급론적 이해.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31호, 113~166.
- \_\_\_\_\_ (2007). 『정보자본주의와 대중문화산업』. 서울: 한울.
- 김용진 (2001). 『신화와 성화: 과학방법론의 패권정치』. 서울: 전예원.

- 김은규 (2005). 다윗과 골리앗을 넘어서: 대안 미디어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논의들과 함의. 『한국언론학보』, 49-2호, 255~283.
- 김훈순·박동숙 (1999). TV드라마 여성작가 연구: 여성주의적 글쓰기의 가능성과 한계. 『언론과사회』, 18호, 149~189.
- 나미수 (2005). 민속지학적 수용자연구에 대한 비판적 성찰: 국내 연구사례에 대한 분석과 평가. 『커뮤니케이션이론』, 1-2호, 68~105.
- 문성훈 (2001). 현대성의 자기 분열: 개별적 자아의 해방과 보편적 이성의 실현. 『사회와철학』, 2호, 147~193.
- 박동숙·조연하·홍주현 (2001).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사적 친분 고리: 출입처에서의 취재원과 기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질적 탐구. 『한국언론학보』, 45-특별호, 367~396쪽.
- 박주연·전범수 (2007). 『미디어 다양성: 디지털 융합시대의 미디어 다양성 정책』. 서울: 한국언론재단.
- 심광현 (2000). 근대화/탈근대화의 이중 과제와 사회운동의 새로운 전망. 『문화/과학』, 22호, 41~81.
- 양정혜 (2004). 뮤직비디오 제작의 관행이 텍스트 구성에 미치는 영향: 제작진들과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8-2호, 134~168.
- 연정모·김영찬 (2008). 텔레비전 연예정보 프로그램의 생산자 문화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 KBS 2TV의 <연예가중계>의 생산현장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2-2호, 82~122.
- 원용진 (1997). 문화연구에 무슨 일이 있었나? 『언론과사회』, 18호, 206~215.
- \_\_\_\_\_ (2000). 문화연구의 미디어논의: 반성과 전망. 『한국방송학보』, 14-3호, 185~230.
- \_\_\_\_\_ (2005). 언론학 내 문화연구의 궤적과 성과. 『커뮤니케이션이론』, 1권 1호, 163~190.
- 원용진·홍성일·방희경 (2008). 『PD저널리즘: 한국 방송저널리즘 속 '일탈'』. 서울: 한나래.
- 유선영 (1998). 홀눈 정체성의 역사: 한국 문화현상 분석을 위한 개념틀 연구. 『한국언론학보』, 43-2호, 427~467.
- \_\_\_\_\_ (2004). 한국 미디어문화연구의 자기 성찰과 또 다른 선택. 『프로그램/텍스트』, 10호, 73~107.

- 윤선희 (2003). 학문담론의 포스트식민주의적 권력과 한국 문화연구의 메타분석. 『한국방송학보』, 17-2호, 265~294.
- 이기형·임도경 (2007). 문화연구를 위한 제언: 현장연구와 민속지학적 상상력을 재접화하기—조은과 조옥라의 ‘도시빈민의 삶과 공간: 사당동 재개발지역 현장연구’의 사례를 매개로. 『언론과사회』, 15-4호, 156~201.
- 이기홍 (2006). 설명적 사회학과 글쓰기. 『한국사회학』, 40집 6호, 1~24.
- 이남표 (2006). 시장개방과 수용자. 『한국언론정보학보』, 35호, 87~114.
- 이남표·김재영 (2006).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정치경제학: 비판적 계승을 위한 시론적 탐색. 『한국언론정보학보』, 33호, 193~226.
- 이민웅 외 (2006). 『방송저널리즘과 공정성 위기』. 서울: 지식산업사.
- 이상길 (2004). 문화연구의 아포리아. 『한국언론학보』, 48-2호, 79~110.
- 이상희 (편) (1983). 『커뮤니케이션과 이데올로기』. 서울: 나남.
- 이영주 (2006). 미디어문화연구의 자기 성찰: 신좌파 비판이론으로서 문화연구의 조망. 『문화/과학』, 통권 48호, 175~195.
- 이오현 (2005). 텔레비전 다큐멘터리프로그램의 생산과정에 대한 민속지학적 연구: KBS <인물현대사>의 인물선정과정을 중심으로. 『언론과사회』, 13-2호, 117~156.
- \_\_\_\_\_ (2007).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그램의 생산과정에 대한 민속지학적 연구. 『언론과사회』, 15-2호, 131~174.
- 이준웅 (2005). 비판적 담론공중의 등장과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 공정한 담론 형성을 위하여. 『방송문화연구』, 17권 2호, 139~172.
- 임영호 (1998). 한국 언론학의 영역주의와 정체성의 위기. 『한국언론정보학보』, 11호, 3~31.
- \_\_\_\_\_ (2001). 한국 언론학에서 비판적 패러다임의 문제설정: 반성과 전망. 『한국방송학보』, 15-2호, 343~379.
- 전규찬 (2004). 텔레비전과 문화다양성, 질 평가의 연관성. 『방송연구』, 겨울호, 7~31.
- \_\_\_\_\_ (2005). 소수(자)성, 매체문화연구 진화의 일단. 『프로그램/텍스트』, 12호, 97~124.
- \_\_\_\_\_ (2006). 커뮤니케이션과 공공영역의 ‘래디컬’한 재구성. 『문화/과학』, 48호, 52~68.

- \_\_\_\_\_ (2007). 가능성의 프로젝트, 창의성 발명의 기획: 문화사회와 미디어(운동)론. 『문화/과학』, 50호, 294~311.
- 조순경 (2000). 한국 여성학 지식의 사회적 향상: 지적 식민성 논의를 넘어서. 『경제와사회』, 45호, 172~197.
- 조항제 (2003). 『한국의 민주주의와 미디어의 권력화』. 서울: 한올아카데미.
- \_\_\_\_\_ (2005). 민주주의·미디어체제의 유형화. 『언론과사회』, 13-4호, 7~38.
- 조희연 (2006). 우리 안의 보편성: 지적·학문적 주체로 가는 창. 신정완 (편). 『우리 안의 보편성』. 서울: 한올아카데미.
- 한동섭 (2002). 미디어산업의 독점유형 및 독점구조 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6-1호, 463~495.
- Alatas, Syed Farid (2006). *An alternative discourse in Asian social science: Response to eurocentrism*. New Delhi: Sage.
- Baker, C. E. (2002). *Media, markets and democracy*. NY: Cambridge Univ. Press.
- Best, S. & Kellner, D. (2001). Dawns, twilights and transitions: Postmodern theories, politics, and challenges. *Democracy & Nature*, 7(1), 101~117.
- Born, G. (2006). Digitising democracy. *Political Quarterly*, 76(s1), 102~123.
- Caldwell, J. (2006). Cultural studies of media production. In M. White & J. Schwoch (Eds.). *Questions of method in cultural studies* (pp.109~153). Malden. MA: Blackwell.
- Calhoun, C. (1995). *Critical social theory*. Oxford: Blackwell.
- Carragee, K. & Roefs, W. (2004). The neglect of power in recent framing research. *Journal of Communication*, 54(2), 214~233.
- Chambers, I. (1986). Waiting on the end of the world? *Journal of Communication Inquiry*, 10(2), 99~103.
- Chen, Kuan-Hsing (1996). Post-marxism: Between/beyond critical postmodernism and cultural studies. In D. Morley & K-H. Chen (Eds.), *Stuart Hall: Critical dialogues in cultural studies* (pp.309~325). London: Routledge.
- Chen, Kuan-Hsing (1998). 아시아문화연구의 탈식민화 문제. 김신동 (역). 『언론과사회』, 23호, 7~43.
- Curran, J. (1990). The new revisionism in mass communication research: A reappraisal.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5(1), pp.135~164.

- Curran, J. (2002). *Media and power*. 김예란·정준희 (역). (2005). 『미디어파워』.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Deacon, D. (2003). Holism, communion and conversion: Integrating media consumption and production research. *Media, Culture & Society*, 25, 209~231.
- Du Gay, P. (ed.). (1997). *Production of culture/culture of production*. London: Sage.
- Du Gay, P. (1997). Introduction. In Du Gay, P. et al (Eds.), *Doing cultural studies: The story of the Sony Walkman* (pp.1~5). London: Sage.
- During, S. (1993). Introduction. In S. During (ed.), *Cultural studies reader* (pp.1~25). London: Routledge.
- Fenton, N. (2000). The problematics of postmodernism for feminist media studies. *Media, Culture & Society*, 22(6), 723~741.
- Ferguson, M. & Golding, P. (1997). Cultural studies and changing times: An introduction. In M. Ferguson & P. Golding (Eds.), *Cultural studies in question* (pp.xiii~xxvii). London: Sage.
- Ferree, M., Gamson, W., Gerhards, J. & Rucht, D. (2002). Four models of the public sphere in modern democracies. *Theory & Society*, 31, 289~324.
- Garnham, N. (1995). Political economy and cultural studies: Reconciliation or divorce.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12(1), 62~71.
- \_\_\_\_\_ (2000). *Emancipation, the media, and the modernity: Arguments about the media and social theory*. NY: Oxford Univ. Press.
- Grossberg, L. (1995). Cultural studies vs. political economy: Is anybody else bored with this debate.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12(1), 72~81.
- \_\_\_\_\_ (1997). *Bringing it all back home*. Durham: Duke Univ. Press.
- \_\_\_\_\_ (2006). Does cultural studies have futures? Should it? (Or what's the matter with New York?): Cultural studies, contexts and conjunctures. *Cultural Studies*, 20(1), 1~32.
- Gunster, S. (2004). *Capitalizing on culture: Critical theory for cultural studies*. Toronto: Univ. of Toronto Press.
- Hall, S. (1977a). Culture, the media and the 'ideological effect'. In J. Curran, M. Gurevitch, J. Woollacott (Eds.),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pp.315~348). Beverly Hills: Sage.

- \_\_\_\_\_ (1977b).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 Marx’s theory of class. In A. Hunt(Ed.), *Class and class structure* (pp.15~60). London: Lawrence & Wishart.
- \_\_\_\_\_ (1982). The rediscovery of ‘ideology’: Return of the repressed in media studies. In M. Gurevitch, T. Bennett, J. Curran, & J. Woolcott (Eds.), *Culture, society and the media* (pp.56~90). London: Routledge.
- \_\_\_\_\_ (1996). Cultural studies and internationalization: An interview with Stuart Hall by Kuan-Hsin Chen. In D. Morley & K-H. Chen (Eds.), *Stuart Hall: Critical dialogues in cultural studies* (pp.392~408). London: Routledge.
- Hall, S., Critcher, C., Jefferson, T., Clarke, J., & Roberts, B. (1977). *Policing the crisis*. London: Macmillan.
- Hesmondhalgh, D. (2002). *The cultural industries*. London: Sage.
- Jacka, E. (2003). “Democracy as defeat”: The importance of arguments for public service broadcasting. *Television & New Media*, 4(2), 177~191.
- Jessop, B., Bonnett, K., Bromley, S., & Ling, T. (1984). Authoritarian populism, two nations, and Thatcherism. *New Left Review*, 25(1), 32~60.
- Kang, Myungkoo (2004). There is no South Korean cultural studies: Beyond the colonial condition of knowledge produc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Inquiry*, 28(3), 253~268.
- Karppinen, K. (2007). Against naive pluralism in media politics: On the implications of the radical-pluralist approach to the public sphere. *Media, Culture & Society*, 29(3), 495~508.
- Kim, Sujeong (2004). Rereading David Morley’s the ‘Nationwide’ audience. *Cultural Studies*, 18(1), 84~108.
- Lichtenberg, J. (1996). In defence of objectivity. In J. Curran & M. Gurevitch (Eds.), *Mass media and society*(2nd. ed.) (pp.225~242). London: Arnold.
- McLaughlin, L. (1999). Beyond “separate spheres”: Feminism and the cultural studies/political economy debate. *Journal of Communication Inquiry*, 23(4), 327~354.
- McLennan, G. (1995). *Pluralism*. Buckingham: Open Univ. Press.
- \_\_\_\_\_ (2006). *Sociological cultural studies: Reflexivity and positivity in the human science*. NY: Palgrave.

- Mirchandani, R. (2005). Postmodernism and sociology: From the epistemological to the empirical. *Sociological Theory*, 23(1), 86~115.
- Morley, D. (1980). *The nationwide audience*. London: BFI.
- \_\_\_\_\_ (1992). *Television, audiences and cultural studies*. London: Routledge.
- \_\_\_\_\_ (1996). Populism, Revisionism and the 'new' audience research. In J. Curran, D. Morley & V. Walkerdine(Eds.), *Cultural Studies and communications* (pp.279~293). London: Arnold.
- \_\_\_\_\_ (1998). So-called cultural studies: Dead ends and reinvented wheels. *Cultural Studies*, 12(4), 476~497.
- \_\_\_\_\_ (2006). Unanswered questions in audience research. *The Communication Review*, 9, 101~121.
- Mosco, V. (1996).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cation*. 김지운 (역). (1998).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 서울: 나남.
- Murdock, G. (1989). Critical inquiry and audience activity. B. Dervin et al (Eds.), *Rethinking communication, vol. 2* (pp.226~249). London: Sage.
- Murdock, G. & Golding, P. (2005). Culture, communications and political economy. In J. Curran & M. Gurevitch (Eds.), *Mass media and society* (pp.60~83). London: Hodder Arnold.
- Sayer, A. (2001). For a critical cultural political economy, *Antipode*, 33(4), 687~708.
- Schudson, M. (1989). The sociology of news production. *Media, Culture & Society*, 11(3), 263~282.
- Shome, R. & Hedge, R. (2002). Postcolonial approaches to communication: Charting the terrain, engaging the intersections. *Communication Theory*, 2(3), 249~270.
- Tunstall, J. (2008). *The media were American: U. S. mass media in decline*. NY: Oxford Univ. Press.
- Wood, B. (1998). Stuart Hall's cultural studies and the problem of hegemon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9(3), 399~414.
- Young, I. (2001). Activist challenges to deliberative democracy. *Political Theory*, 29(5), 670~690.

(투고일자: 2008.05.30, 수정일자: 2008.07.10, 게재확정일자: 2008.07.21)



## A Critical Review on the Critical Communication Studies in Korea

Hang-Je Cho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essay explores a critical review of the Korean critical communication studies focused on the problematic of cultural studies and political economy in 2000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The ‘consumer turn’ or ‘audience turn’ in new revisionism modelling John Fiske’s cultural studies has been interpreted not to complement but to substitute the necessary criticism of the post-authoritarian media establishment of Korea at that time, arising identity crisis of Korean cultural studies as one of the critical camp. On other side, however, some political economy studies close to the unilinear theses of orthodox marxism has been appraised to neglect the complex process and structure of media and cultural production as well. While the press war between the market-dominant dailies and some progressive dailies has given rise to a whole debate as expected in consolidating period of Korean emerging democracy, the conjuncturalism as modelled by Hall’s ‘authoritarian populism’ failed to initiate a new theoretical practice in Korea. Finally, this review essay propose the some new research issues that would converge cultural studies and political economy, modernism and postmodernism; citizenship vs ‘cultural citizenship’(valuing the private identity and gender) or Habermasian public sphere vs ‘cultural public sphere’, the culture of production, (modern)citizen/(postmodern)consumer(recently debated in English media policy), ‘differentiation’ in capitalist production and ‘difference’ in consumer sovereignty, 21c future vision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as one of the 20c institutions.

Key words: critical communication studies, cultural studies, political economy